



[산업] 삼성전자 기업평판 톱10 복귀 사회공헌 인정받아 05



Economy

코스피	2165.79 (-9.81)	코스닥	736.83 (-9.87)
금리 (미국 3년)	1.82 (-0.01)	환율 (원/달러)	1129.00 (+0.20) (7일)

3월 '5G 상용화' 무산 과기부 "준비 덜 됐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2019년 3월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가 사업자 간 이해득실 조율실패 등 설익은 정책과 단말기 출시 지연 영향으로 무산될 전망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열린 '2019년 과기정통부 주요 업무 계획' 브리핑에서 5G 상용화 계획 지연을 사실상 인정했다.

전성배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은 "5G는 망 구축과 함께 단말이 있어야 상용화 되는데 단말기 품질이 완벽하게 완료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상용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3월 말 상용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를 준비하던 지난해부터 올해 3월 세계 최초 5G 상용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글로벌 표준화 일정에 비해서도 앞선 일정이다.

빠른 상용화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너무 빠른 일정 탓에 곳곳에서 잡음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5G 전파를 쬐지만, 단말기가 문제였다.

업계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와 LG전자 'V50 씽큐' 모두 빨라야 4월 출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갤럭시 S10 5G는 애초 이달 22일 사전예약을 시작해 이달 말 출시되리라 예상됐지만, 품질 안정화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이르면 4월 중순에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전망이다. LG

/김나인 기자 silkni@

50대도 '주택연금' 가입 공시가 9억원까지 허용

금융위 업무보고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대에서 50대로 낮춘다. 가입주택 가격상한 기준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해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층에게는 2%대의 전·월세 금융지원 상품을 제공해 주거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정책 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한 고령층·청년층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최 위원장은 "고령화 추세에 맞게 주택연금을 노후 생활안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수요층을 확대하고 기준을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9억원 이하의 실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만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50대로 낮춘다. 가입주택 가격상한 기준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한다. 가격상한기준이 바뀌면 시가 기준 약 13억원 정도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자녀동의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는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상품을 새로 출시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롯데·신세계·삼성 이어 현대차마저 가동 중단?

대륙의 역습, 韓기업 무덤된 중국

사드·현지업체 성장 등에 롯데 등 잇따라 중서 철수

삼성, 작년 텐진공장 중단 현대차도 설비축소 등 검토

중국이 한국 기업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한 때 한국 기업에 '기회의 땅'으로 불렸던 중국이 이제는 '죽음의 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은 14억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시장과 값싼 노동력 등으로 한국 기업들이 앞다퉈 진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적인 이슈로 인한 변수와 중국인들의 애국주의, 현지업체의 성장 및 경쟁 심화 등으로 한국 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사드 이후 유통업 철수 줄이어

7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통업체들의 경우 2016년 이후 사드로 피해를 입었다. 당시 롯데는 직격탄을 맞은 대표 기업이다. 중국 현지 롯데마트 100여곳이 중국



정부 제재로 영업에 방해 받았다. 반한 정서가 커지면서 매출도 크게 줄었다. 결국 지난해 롯데마트 철수를 결정했다. 손실액 추정치는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달에는 백화점 5곳 중 3개를 청산과 지분 매각 등으로 정리키로 했다.

신세계는 2017년 일찌감치 중국을 떠났다. 중국 진출 20년만이다. 일각에서는 유통 업계가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시장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실적 악화에 빠졌다는 시각도 제시한다.

그러나 반한 감정에 따른 한국 브랜드 외면이 더 큰 영향을 줬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차별 정책에 따른 몸살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제조업 현지 판매 감소 후폭풍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내 제조업체들은 중국 시장의 판매 감소에 따라 현지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등 규모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2010년 초반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1992년 한·중 수교를 통한 '비단길'이 열리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으며 현지 공장에 공을 들였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의 중국 법인의 매출은 2011년 한 해 동안 510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현지에서 몸집을 키우던

삼성전자는 2016년을 기점으로 경영 악화를 맞으며 사업 축소 및 인력감축에 돌입했다. 주요 원인으로 2008년 중국 신노동계약법이 시행되고, 2010년 이후 최저 인건비 인상 및 5대 사회보장보험 이슈가 부각되면서 기업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 꼽힌다. 또 현지 스마트폰 업체인 샤오미와 화웨이의 저가 경쟁에 밀리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중국 텐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수출용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주요 생산기지 중 하나였지만, 공장을 멈추고 모든 직원을 내보냈다. 텐진공장 철수 이유는 생산 전략 변화 때문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생산거점 중심을 인도와 베트남 등으로 이동시키면서 텐진 공장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추측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베트남과 인도 공장 생산 비중을 70% 가까이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에 박닌성 연풍, 인도 노이다 공장이 주인공이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오랜만에 파란하늘 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이 미세먼지가 점차 걷히며 푸른빛을 찾아가고 있다.

/연철뉴스

한전, 산업용 전기료 인상 만지작... 기업부담 커질듯

개편안 초안 업계 의견 수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어"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적자 쇼크에 시달린 한국전력이 실적 회복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한전의 경영실적

과 무관하며 요금 조정시기과 조정률은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만 1조9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지만 연료비, 전력구입비가 큰 폭 오르면서 결국 6년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2017년 한전의 영업이익이 4조593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총 5조1612억원이나 이익이 급감한 셈이다.

영업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국제 연료가격의 가파른 상승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전자회사의 연

료비 부담이 3조6000억원(21.6%), 민간발전사로부터 전력구입비용이 4조원(28.3%)이나 각각 증가했다.

현재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 초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

특히 낮은 심야시간 요금이 경영 악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전기료 체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야에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들이 많게는 수백억씩 전기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 1안은 심야시간 경부하(오후 11시~오전 9시) 요금을

10% 올리되, 최대부하(오전 10시~낮 12시·오후 1~5시)와 중간부하(오전 9~10시·낮 12시~오후 1시·오후 5~11시) 요금은 5%씩 낮추는 안이다.

2안은 경부하 요금을 5% 인상하고, 최대부하와 중간부하 요금은 2.5%씩 낮추는 것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산업용 요금의 조정 시기 및 시간대별 조정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앞선 간담회시 제시된 조정안은 참여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